

민간 끌고 정부 밀고... 청년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든다

산업부, '산단 혁신 종합대책' 발표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 전면 재검토
디지털 전환, 탄소 저감 등 추진

노후산단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착공 20년 지난 노후산단 증가하며 성장세 둔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시설과 기반시설, 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1257개 산업단지에는 2021년말을 기준으로 11만여 기업이 입주, 227만명을 고용 중이다. 2020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한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근로·정주여건 악화, 청년층 기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유투이미지

피, 안전사고 반복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7년~2011년 13.9%까지 상승했으나 10년 후인 지난 2017년~2021년 기간엔 2.3%로 급감했다. 고용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6.0%에서 1.0%로 쪼그라들었다.

탄소중립 요구와 디지털 전환 확산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산단 입주기업의 어려움

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산단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94.3%)을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변동에 취약해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산단이 전반적인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낮고, 글로벌 탄소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배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전환과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도시와의 부조화 심화 등으로 청년층이 산

단 근무를 기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대체하는 등 근로·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지원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산업단지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산단의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에 따라 '화석연료형(여수산단)', '전력중심형(인천남동)', '혼합형(구미산단)' 등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15개 탄소저감 산단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산 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주도에 관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으로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제조시설을 갖추기 힘든 창업기업과 산단 제조기업 간 매칭,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산단의 청년 창업 거점화를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기 '욕실세정제' 8개 중 2개, 곰팡이 완전사멸 못해

한국소비자원, 8개 제품 평가
필수 표시사항 누락 제품도

곰팡이 세정제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욕실세정제 8개 브랜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곰팡이를 완전 사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액성(pH)과 내용량이 표시와 달랐고, 세척 성능도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8개 브랜드 제품으로, ▲강

력한 곰팡이제거제(블랙홀릭) ▲곰팡이 소화기(아토세이프) ▲무균무때 곰팡이용(피존) ▲브레프 파워 곰팡이용(헨켈홈케어코리아) ▲뿌리는 곰팡이제거제(피곳) ▲생활공작소 뿌리는 곰팡이제거제(생활공작소)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유한양행)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엘지생활건강) 등 8개 제품이다.

욕실의 타일과 변기 등의 표면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곰팡이 성능을 시험한 결과, 물체 표면 위 곰팡이에 시험 대상 제품을 가해 15분간 접촉시킨 조건에서 곰팡이를 '완전사멸'한 제품은 6개였고, '뿌리는 곰팡이제거제'와 '곰팡이 소화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

았다.

또 욕실의 욕조나 타일 등에 생긴 비누 때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양호'한 제품이 6개였고, '우수' 제품은 없었다. '브레프 파워 곰팡이용'과 '생활공작소 뿌리는 곰팡이제거제'는 세척 성능 평가 양호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용액의 액성(pH)과 용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도 있었다. '강력한 곰팡이제거제', '곰팡이 소화기', '뿌리는 곰팡이제거제' 3개 제품은 액성을 약알카리성으로 표시했으나, 시험 결과 액성은 알카리성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100mL 당 가격은 '뿌리는 곰

팡이제거제'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력한 곰팡이제거제'가 36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6.7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가격이 가장 비싼 '강력한 곰팡이제거제'의 경우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었다.

벤젠과 납 등 유해물질 14개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따라 항곰팡이 성능과 세척 성능 등 주요성능과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

한국수력원자력,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 개최

체코·폴란드 신규원전사업 계획 논의

한국수력원자력이 3일 체코,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수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지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 각 사 대표들이 참여해 수주 경쟁력 추가 확보 방안 및 향후 수주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팀코리아는 2018년 9월 체코 신규원전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협조



3일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관련 현안 공유 등을 위한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왼쪽부터), 나기용 두산에너지빌리티 부사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를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체코전력공사로부터 입찰 안내서를 받은 후 팀코리아는 이달 말 최초 입찰서 제출을 목표로 입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는 내년 9월 수정 입찰서를 한 차례 더 접수한 후 2024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연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이태원 참사 부상자,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충격과 부상자 간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사항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

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자중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 수습이나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